

여수엑스포 유치 막판 '굳히기'

민·관·정 범국가 차원 본격 유치활동 돌입

정부와 국회, 여수시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권 확보를 위해 막바지 유치활동에 돌입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는 10월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인기 국회 특별위원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오현섭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달 10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임원들은 다음 달 하순 유럽지역 세계박람회기구(BIE) 소속 회원국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다. 여수시는 다음 달 17~22일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박람회 후보지 등을 둘러보게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또한 다음 달 9~30일 BIE 회원국 언론인들을 초청해 박람회 추진상황 설명회를 갖는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들과 국민의 유치 열기를 모으기 위해 다음 달 11일 여수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12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 여수항우회원과 간담회를 갖는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28~31일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 총회에 참석하는 BIE 회원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11월27일로 잡혀있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달 범국가적인 유치 노력이 활발하게 펼쳐진다"며 "여수시민들은 박람회 유치를 전력을 쏟고 있는 정부와 재외공관장, 재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이메일과 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참석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한국시간)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톨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여수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총리 유엔서...朴지사 중남미서... 한가위 잇은 유치 활동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참석중인 한덕수 총리는 지난 25일 유엔본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스위스 연방대통령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루이스 이나시오 톨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고, 톨라 대통령은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긍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어 미셸린 칼미-레이 스위스 연방 대통령 및 영국 환경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양자회담 외에도 스페인, 나이지리아, 덴마크,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바베이도스, 이란, 쿠바 등 유엔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들과 만나 여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각국 대표 면담에서 한국의 남부 해안도시 여수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세계박람회기구(BIE)가 인정한 2012년 엑스포 개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담긴 영문 명함을 제공하며 홍보전을 펼쳤다.

이와 함께 박준영 전남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도립국악단 등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중남미 지역 BIE(국제박람회사무국) 회원국을 방문해 여수박람회 유치 활동에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박 지사는 25일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루시아를 방문해 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해양위기와 해양을 주제로 한 2012 여수박람회의 시의적절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지난 17일부터 중남미를 방문중인 박 지사는 28일 귀국할 예정이지만 이번 중남미 문화사절단은 다음 달 6일까지 김영록 행정부차와 함께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외압·횡령·직권남용... 卞-申 연결고리 포착

이르면 오늘중 영장 재청구

검찰이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혐의를 연결하는 고리를 속속 찾아냄에 따라 의혹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각자 혐의를 파는 단계에 머물렀던 검찰 수사가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와 신씨의 횡령 혐의,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신씨의 학력위조 은폐의 접점을 찾음에 따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6일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에 성곡미술관 후원을 청탁했다는 당사자들 진술 등 신빙성이 높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에 산재 차, 차관이라는 변 전 실장의 직무권한도 감안해 후원금을 포괄적 뇌물로 보고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의 영향력으로 태낸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가 신씨로부터 횡령돼 변 전 실장 본인에게도 흘러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행정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신씨의 부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영배 스님은 흥덕사 국교지원이 결정될 무렵 재단 이사회와 자칭한 교계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이 26일 신정아씨 횡령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체 간담회에서 잇따라 '신씨 박사학위는 진짜'라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묻어주는 대가로 국고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추궁하고 있으며 '3자 공모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영배 스님도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씨에 대해 이르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 빠르면 2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卞씨, 신정아 가짜학위 정말 몰랐나

인지 여부 따라 죄질 달라져

변양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의 부탁에 따라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공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력위조를 정말 몰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일까지도 "언제 학력위조를 알았는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최근까지도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짜

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 전 실장의 이 같은 진술은 향후 법률적 쟁점이 될 사안을 일단 무조건 부인해 보자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변 전 실장은 학력위조 사실을 알고도 신씨를 2005년 동국대 흥덕사 전 총장에게 추천했다면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력위조를 알면서 대기업들이 후원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면 부적격자를 비호했다는 점에서 혐의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도 있는 처지다.

/연합뉴스

정윤재씨 영장 주말쯤 재청구

검찰 "추가 진술 확보 수사내용 대폭 보강"

말 늦어도 내주 중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범인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청장과 김씨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무조사를 중단해주고 김씨로부

터 1억원을 받은 정 전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 전 청장이 김씨에게 "정 비서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12억6천만원 상당의 이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세무조사 무

차 청탁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로 '약속'해 준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때 이 부분의 관련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주중에 정 전 비서관 주변인물과 가족 등을 불러 진술을 추가로 받는 등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부산지역 폭력배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팀에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1명을 추가로 배치,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